

---

#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정 현 일 사 무 관

---

# 01

## 제조물책임법이란?

---

# 제조물책임법이란?

## 제정배경

- 소비자 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적 조화를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
- 기존 민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한계를 인식
  - 채무불이행 :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하자담보책임 : 무과실책임이기는 하나, 확대 손해에 대한 청구 불가능
    - ※ 확대손해 :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 또는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
  - 불법행위책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입증 부담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조업자에 대하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무과실책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법적 성격

-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불법행위의 특칙) + 소비자 보호법적 성격

# 제조물책임법 적용범위(1)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완성품의 원재료 및 부품도 제조물에 해당”

“가공된 농축수산물(예: 조미김)도 제조물”

“미가공 1차 농축수산물, 부동산, 소프트웨어는 적용대상 아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 제조업자?

①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끔 표시한 자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 제조물책임법 적용범위(2)

**결함?**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상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 결함 판단기준

- 제조물의 특성
- 제조물이 통상 사용되는 형태(용도)
-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가 기대하는 내용
-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 사용자에게 의한 위험회피 가능성

**설계상 결함 판단기준** :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①제품의 특성 및 용도, ②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③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④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⑤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⑥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⑦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표시상 결함 판단기준** :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①제조물의 특성, ②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③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④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⑤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게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대법원 2003.9.5. 선고 2002다17333 판결)

# 결함 판단사례 I

자동차 급발진 판례(대법원 1999.2.25. 선고 97다26593 판결)

**제조상 결함(부정)** : 사고 이전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사고 후 점검결과 차량 부품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발진 조건인 rpm 4,000 이상, 스로틀밸브 개방, 브레이크에 의한 제동 불가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자동차공학상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려움

**설계상 결함(부정)** : 시프트록(Shift Lock)은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건 후 자동변속기 레버를 주차위치에서 후진 또는 전진 위치로 변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만 한하여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의 급발진 위험성을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시프트록 장착이 합리적 대체설계에 해당하지는 않음

**표시상 결함(부정)** : 취급설명서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동차변속기 선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

## 결함 판단사례 II

고엽제 판례(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제조상 결함(부정)** : 피고 몬산토가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제조, 공급함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가 의도한 설계는 없었고, 피고 몬산토가 그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의도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었음도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의도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피고 몬산토 공급의 고엽제에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도 이유없음

**설계상 결함(인정)** : 피고들은 고엽제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2,4,5-T 내 TCDD 함량 기준을 0.1ppm 이하로 설정하는 대체설계를 채용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대 가능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고엽제 내의 TCDD 함량을 0.05ppm 이하로 낮추어 TCDD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표시상 결함(부정)** : 고엽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미국 정부에 대하여만 개별적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되었던 것으로서, 고엽제에 포함된 TCDD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피고들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고엽제의 사용방법을 통제할 수 있었던 미국 정부가 피고들에 대하여 고엽제의 위험성이나 그 사용 및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고엽제 용기에 표시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고엽제의 용기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함 판단사례Ⅲ

장미비료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표시상 결함(인정)** : 이 사건 비료의 발효과정에서 위 비료의 포장지 등에 명시된 암모니아 가스 발생기간인 15일~20일을 훨씬 초과하여 40일 이상 장기간 가스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재배하던 각 장미가 이 사건 비료의 살포 및 발효과정에서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위 가스에의 장기간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발효과정에서 작물의 생육에 유해한 가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발효 유기질 비료는 이 사건 피해 작물의 경우처럼 이미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 정식되어 생육중인 다년생 화훼작물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이 사건 비료가 원고들의 경우와 같은 재배환경 하에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이상 그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

발마사지기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20. 선고 2006가합81863)

**제조상 결함(인정)** :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 제조물책임법 적용범위(3)

손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 제조물 자체 손해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자가 노래방기기 제작자가 제조한 노래방기기를 판매하다가 노래방기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업중단 등 손실을 입은 사건에서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 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 라고 판시  
(대법원 1999.2.25. 선고 97다26593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를 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새로 시공된 부분의 마루가 썩거나 변질, 변색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마루 교체비용, 공사대금 수급 지연비용, 영업손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수원지방법원 2009.8.20. 선고 2008가합27878 참고)

# 면책사유

<제조물책임법 제4조>

1호	미공급의 항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호	개발위험의 항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2나32662
3호	법령준수의 항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참고판례 : 대전지방법원 2008.5.20. 선고 2006가단91350
4호	제작지시의 항변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면책제한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책주장 제한

※ 면책사유에서의 공급이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 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개발위험의 항변(2호) 관련

개발위험의 항변에서 말하는 과학기술 수준에 대하여 제조물 공급 당시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최고수준의 지식까지를 포함**

합리적 대체설계의 채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물 공급 당시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적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이 미국 정부에 고열제를 납품할 당시 미국의 제초제업체가 2,4,5-T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TCDD를 탐색, 제고하여 도달할 수 있는 TCDD 함량의 최저 수준은 0.1ppm 정도였다 (당시 허큘리스는 0.1ppm 수준의 TCDD까지 탐색, 제거하는 내용의 2,4,5-T 설계를 채택하였고, 실제 그에 부합하게 TCDD 함량 0.1ppm 미만의 2,4,5-T를 생산하였다.)

(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 법령준수의 항변(3호)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만큼 제조물책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의 크기와 달리 SP 압착링의 후면 외경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크기로 제작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검정승인을 받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대전지방법원 2008.5.20. 선고, 2006가단91350)

---

# 02

## 주요 법령 개정사항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신설>

## 요건

- ① 제조업자가
- ②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 ③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 ④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 **최대 3배!**

##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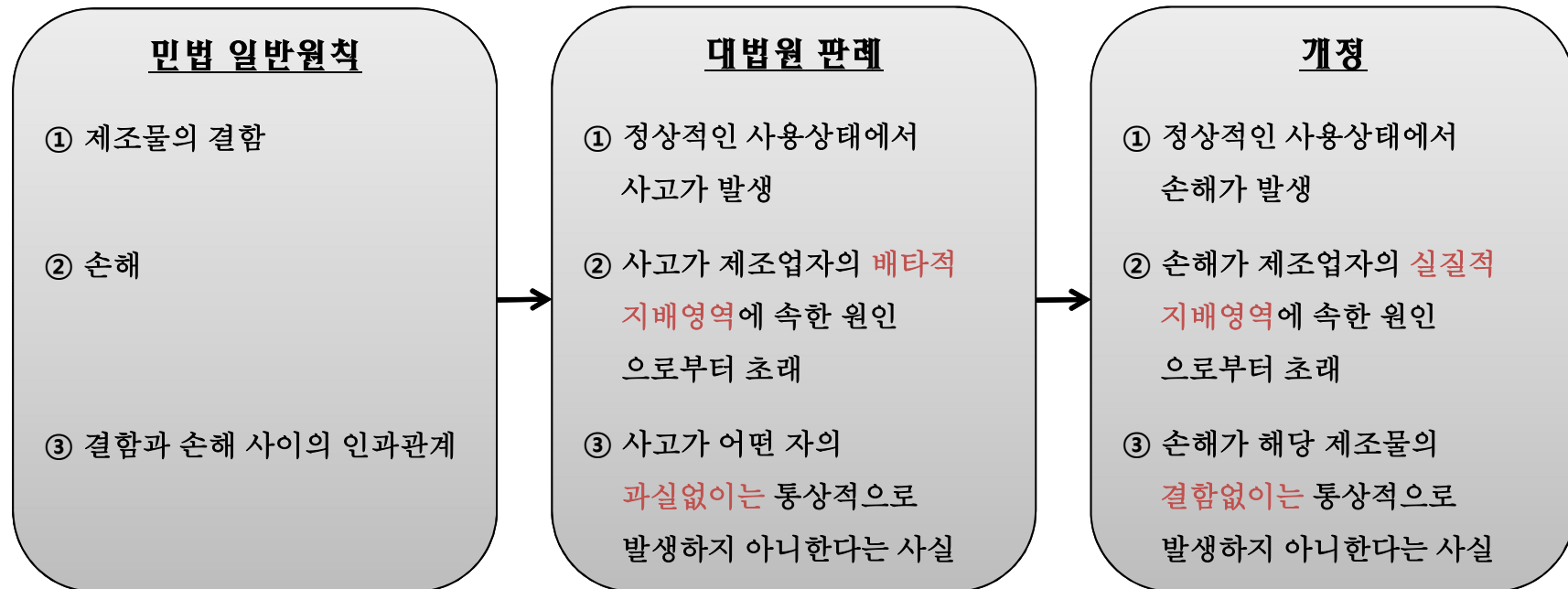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하도급법 (제35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3배
대리점법 (제34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3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 거래거절행위	3배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3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3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3배
기간제법 (제13조)	사용자의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3배

## 2.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신설>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실질적 지배영역 vs 배타적 지배영역

실질적 지배영역이 배타적 지배영역보다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

☞ 배타적 지배영역 : 결함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구.

제3자의 개입이 배제

☞ 실질적 지배영역 : 제3자가 제공한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도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제조업자의 지배에

속한 원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추정

## 결함없이는 vs 과실없이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 3.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개정>

**공급업자**는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충적 책임**을 부담

### 기 존

- 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었을 것
- ② 그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것
- ~~③ 공급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이전 공급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④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것

### 개 정

- 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었을 것
- ② 그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것

#### 면책요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이전 공급업자를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면책요건 증명책임 전환

## Q. 상당한 기간?

피해자가 공급업자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고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 날로부터 공급업자가 **고지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예: 독일은 1개월)

## Q. 복잡한 유통과정에서 제조업자를 알기는 쉽지 않음

굳이 제조업자가 아니더라도 **유통과정에 있는 공급업자**를 알리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

## Q. 공급업자의 과도한 부담?

1. 여전히 피해자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

☞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2. 건전한 시장경제에서 공급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모르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움

☞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은 판매·유통해서는 안됨!**

---

# 03

## 향후 전망 및 당부사항

---

# 향후 전망 및 당부사항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015년~2017년)

(소비자) 소비자 역량 강화

(시장, 사업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정부) 글로벌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의 소비자안전망 강화

정보비대칭 시장의 소비자거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 안전 확보는 시대적 요구 : 안전 관련 규제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의 책임성 강화 : 자유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기업은 보호, 악질적 기업은 퇴출



☞ 내가 생산한 제품은 내 자식처럼

☞ 기업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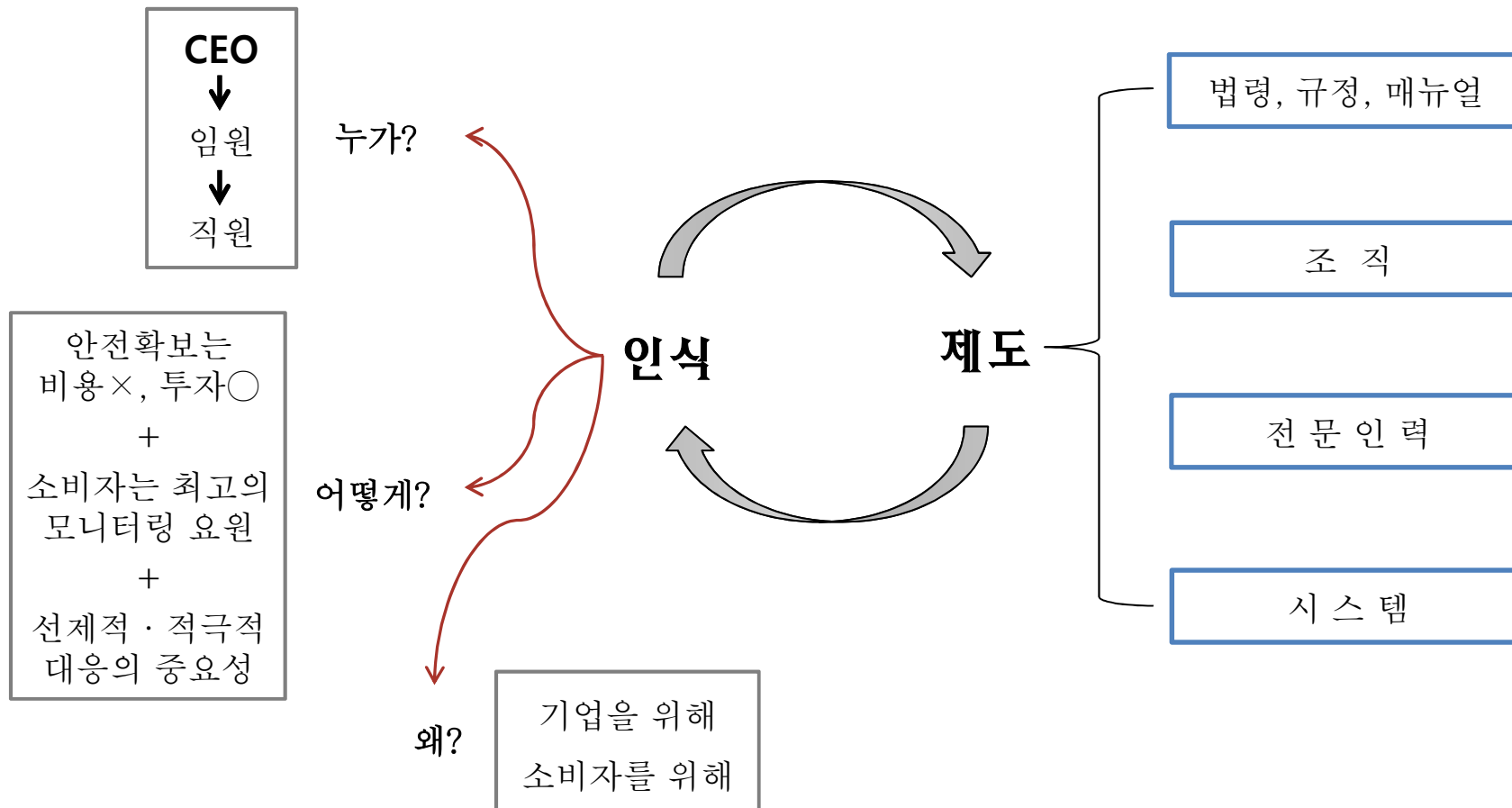
☞ 설계부터 최종 매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최소 10년간 보관)

☞ 결함제품에 대해 선제적·적극적 리콜과 재발방지책 마련

☞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도 검토

# 기업의 대응방안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



## [참고] 체크리스트

### 전사적 PL 검토 목록

- 사내체계
  - 경영진의 PL의식 정도
  - 경영방침이 설정되었는가
- 조직
  - PL조직이 있는가
  - PL업무가 명확하게 부서별로 지정되었는가
  - 각 작업자에게 PL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했는가
- 교육
  - PL과 제품안전에 대한 교육체계가 있는가
  - PL교육 강사는 준비되었는가
  - PL전담자 양성과정, 협력사 교육 등이 있는가

### 단계별 PL 검토 목록

- 설계·개발단계
  - 모든 안전규정, 기준, 법규 등이 문서화로 보관되었는가
  - 안전한 설계라고 확신하는가
  - 사용자의 지식, 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 인간공학적 분석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Fool Proof, Fail Safe가 되어 있는가
  - 안전장치는 장착되었는가
  - 예견되는 오작동, 오용, 오작용에 대한 방안을 설계했는가
  - 사용되는 환경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는가(온도, 습도 등)
  -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 제조단계
  - 제조공정이 명시되어 있고, 명시된 대로 제조하는가
  - 설계변경, 제조공정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가
  - 제조상의 결함은 검사에서 검토되는가
  - 검사기준은 합리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규정대로 실시하는가
  - 불합격된 제품의 처리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가
  - 상품을 충분히 보호하는가
  - 유통과정 수송방법은 합리적으로 명시되었는가
  - 관련 법률은 검토되었는가
  - 하청업체도 PL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사양서대로 제작하고 있는가
  - 납품시의 검품에 만전을 기하는가
  - 품질보증 제도가 있는가

---

# 04

## 개정 제조물책임법 전문

---



##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4.19.] [법률 제14764호, 2017.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부칙** <제14764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